

‘황제집종 의혹’ 법정공방으로...목포시의원들 불복

법원 김영란법 위반 3만원씩 과태료 부과에 의원 4명 이의제기

“정식재판 넘어가면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결과 달라질 수도”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목포시의원 4명에게 법원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가려지게 됐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목포 시의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해 과태료 약식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4명의 의원 각각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목포시의원 4명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에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즉 목포시의원 4명이 이의를 신

청한 만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이 약식으로 진행된 만큼 정식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미지수다.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진 한 목포시의원은 “이의신청은 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태료 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식재판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약식재판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 재판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식 재판이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7일 오후 목포 시보건소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모 의원실로 출장을 가 의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는 “시의원이 라는 직위를 이용해 특권의 행위를

아기시킨 점에 대해서는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보건소 직원이 직접 의회를 방문,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목포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어린이급식센터 추가자료 보고를 위해 담당자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방문했고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이 위원장실에 올라가 자료를 본 후 직원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를 했다”며 “그후 직원과

의원들은 기획복지위원장실을 바로 나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는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데 이어 시의회 폐쇄회로TV를 통해 회의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등을 살펴봤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수사관을 보내 목포시 보건소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보건소 공무원과 시의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목포경찰서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박정수 기자

‘수요집회’ 28년만에 장소 옮긴다...보수단체, 자리 선점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4차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의기억연대 지지 및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매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열리던 ‘수요집회’가 보수단체의 자리 선점으로 28년 만에 장소를 옮기게 됐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소녀상 앞 집회신고가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보다 후순위이다.

정의연의 집회신고 장소가 일본대사관 100m 이내인 만큼 24일 수요집회는 평화상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연대가 소경찰 ‘정의연 집회신고 후순위...상호 집회방해 우려’ 자유연대 7월8일까지 옛 일본대사관 앞 집회신고해

녀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의연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회시간 및 장소가 중첩돼 상호 집회방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대사관 방면 불순물 투척 및 과도한 소음 송출과 진입 시도 등 외교기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제한통

고 전달 및 질서유지선(연합뉴스 앞 인도 및 2개 차로) 설정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자유연대는 23일 자정을 시작으로 7월8일까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다.

지난주 수요집회에서 정의연 측은 자리를 지켜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집회신고 순위가

뒤로 밀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집회 역시 당일 집회 개최를 예고한 자유연대보다 후순위로 분류돼 경찰은 신고된 시간 중 정오~오후 1시를 제외하고 집회 제한통고했다.

신봉우 기자



여수 영취산 송전탑건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영취산을 관통하는 24기의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호남화력발전소 폐쇄 후 재건설? 건강·생명 위협...절대 용납 못해”

여수 영취산 송전탑건설 반대대책위 집회

여수 영취산 송전탑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여수 호남화력발전소 정문에서 영취산을 관통하는 24기의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한전이 올해 말 호남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정부방침과 달리 유연단 또는 LNG화력발전소를 건설 계획 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다시금 신속 천마농성과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계획은 제6차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한 345kV 광양-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목적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특히 토지소유자

와 주변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여수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은 당초 초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이유로 ‘여수단지 확장’에 따른 345kV 환상망 구축 및 전력 계통 보강’을 들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정책 적기 이행으로 2020년 12월 예정 호남화력 50MW폐지, 미세먼지 저감 대비’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 정책대로 호남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다시 화력발전소를 짓지 말아야 한다”며 “영취산 송전탑의 지중화와 함께 강제 공탁 행위 시행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5·18 헬기사격 증거 옛 전남도청에서도 찾는다

조사용역 업체 선정...12월 말까지 탄흔 조사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도 5·18 당시 헬기사격을 포함한 모든 탄흔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추진단)은 1980년 5·18민중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에 대한 탄흔 조사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조달청에 탄흔 조사 용역 업체 입찰 공고를 냈고 이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6월말 탄흔 조사 착수 보고회를 가진다.

탄흔 조사는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옛 전

남도청 원형 복원은 탄흔 조사가 끝난 후 탄흔 자국을 보존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과 옛 경찰국 등 총 6개동에 외관과 내벽에서 모든 흔적을 발견한 후 여러 과학적 기법으로 수많은 흔적 중에 진짜 탄흔을 찾을 계획이다.

먼저 탄흔 찾기에 앞서 실제 5·18당시 사용했던 화기와 비슷한 샘플을 만든 후 ‘오버랩’, ‘갑다선 공법’, ‘테라헤르츠(투과성을 가진 방사선 전자파)’, ‘GPR공법(지반투과 레이더 공법)’ 등 다양한 기법으로 탄흔의 흔적을 분석한다.

여러 흔 중 탄흔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샘플 성분조사를 진행해 탄흔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 이를 기반으로 일반 소총 탄흔과 헬기 사격흔 등으로 분류해 당시 헬기사격 증거를 뒷받침할 주요한 사료로 보존할 방침이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